

# 21세기 중국의 해양문화정책 설계와 추진 방향\*

권기영\*\*

## 〈目 次〉

1. 서론
2. 중국 해양문화정책 범주 구성
3. 중국 해양문화사업 정책 방향
4. 중국 해양문화산업 정책 방향
5. 중국 해양문화 대외정책 방향
6. 결론

## 1. 서론

1988년 CCTV를 통해 방영되면서 중국 국민들에게 충격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다큐멘터리 〈하상(河殤)〉은 중국문명과 서구문명의 특징을 ‘황토문명(즉 농업 문명)’과 ‘남색문명(藍色文明, 즉 해양문명)’으로 선명히 대립시키면서 중국문명의 몰락이 필연적인 것임을 주장했다.

대지에 안주하여 소규모의 농작을 위주로 하는 내륙문명으로서의 중국 문명은 지중해에서 발원하여 태평양을 석권한 현대 서방문명의 충격아래에서 이미 문화 창조의 활력을 잃었으며, 심지어는 안신임명의 근거조차 잃고 말았다.…… 〈하상〉은 단지 중국문명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닌 지구상의 모든 농업문명이 해양문명의 도전 아래 이미 해체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해 내려는 것이다.<sup>1)</sup>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9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조교수

1) 陳曉林, 「황하의 비창, 중국의 이상」, 蘇曉康·王魯湘 著, 洪熹 譯, 『하상』, 동문선, 1989.

물론 〈하상〉의 기획자들 역시 대륙과 해양, 농업과 상업의 대비로 ‘중국문명의 몰락’이란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폐단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지만, 여하튼 〈하상〉의 문제제기가 1990년대 중국에서 ‘해양’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해양’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특히 2013년을 전후 한 시기는 중국의 해양 정책이 새로운 전기를 맞는 해로 기억된다. 우선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해양강국’ 건설을 새로운 국가 전략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것은 중국 정부가 최초로 ‘해양’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거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어서 2013년 7월 중공중앙정치국 제8차 집체학습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 역시 ‘해양강국’ 건설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국가의 주권·안보·이익을 보호하며,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사회목표 달성과 나아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음을 강조했다.<sup>2)</sup> 그리고 이러한 국가 전략 목표에 맞추어 중국 정부는 〈국가 해양사업발전 ‘125’규획<sup>3)</sup>〉, 〈전국해양공능구획(2011년~2020년)<sup>4)</sup>〉 등을 제정하고, 국가해양위원회(國家海洋委員會)를 설치했으며, 국가해양국(國家海洋局)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조정했다.

다른 한편 2013년 9월과 10월 시진핑 주석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중국의 새로운 미래 전략, 즉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제안했는데, 그 가운데 ‘일로(一路)’는 바로 ‘해양’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2013년을 전후로 중국 정부는 ‘해양강국’ 건설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해양’에 관한 정책 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새로운 국가 전략, 즉 ‘해양강국’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21쪽.

2) 習近平, 「進一步關心海洋認識海洋經略海洋, 推動海洋強國建設不斷取得新成就」, 新華網, 2013.7.31.

3) 國家發改委, 國土資源部, 國家海洋局 연합 발표, 『國家海洋事業發展“十二五”規划』, 2012.

4) 國務院, 『全國海洋功能區划(2011年~2020年)』, 2012.

있어서는 정부와 학계의 견해가 모두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도대체 무엇이 해양강국이고, 중국은 왜 해양강국을 건설해야 하며, 중국은 어떤 해양강국을 건설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해야 해양강국을 건설할 수 있으며, 중국이 해양강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표된 주요 정책 문건들과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해양강국'을 둘러싼 시각과 입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근대 이래 세계 역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국가는 대체로 서구의 경쟁적·침략적·패권적 '해양강국'이었다. 둘째, 해양강국은 천편일률적인 동일한 모델이 아니다. 영국식·미국식·일본식의 침략적·확장적 해양강국 역시 하나의 모델일 뿐이며, 이러한 모델은 지속될 수 없다. 셋째, 따라서 중국이 이들과 다른 독자적인 해양강국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중국만의 해양담론이 있어야 한다. 넷째, 중국이 지향하는 해양강국은 세계해양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시범적·선도적 강국이어야 한다. 다섯째, 해양강국은 단지 해양의 경제·군사적 강국만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해양문화'의 강국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략적인 공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해양'에 대한 관심은 실제로는 주로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의 해양발전 키워드는 '해양개발'이었고, 2003년 중국 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강령성 정책 문건 역시 '해양경제'에 관련된 것이었다.<sup>5)</sup> 특히 2008년 해양과 관련하여 최초로 수립된 총체적 계획이자 해양사업 발전의 이정비로 평가되는 <국가해양사업발전규획강요(國家海洋事業發展規劃綱要)>에서도 '전 국민의 해양의식 증강과 해양문화의 발전'을 실천계획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지만 '해양문화'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말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1997년 중국해양대학에 전국 최초로 '해양문화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98년 이후에는 절강해양학원(浙江海洋學院), 광둥해양대학(廣東海洋大學),

5) 國務院, 『全國海洋經濟發展規劃綱要』, 2003.5.9.

상해해사대학(上海海事大學), 대련해양대학(大連海洋大學)에 각각 '해양문화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기타 '해양' 관련 연구기관들도 연이어 설립되었다.<sup>6)</sup> 특히 2005년 정허(鄭和) 항해 60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개최된 대규모의 기념 활동과 학술대회는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연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본격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에 이르러서였다. 2012년 발표된 <국가해양사업발전 '125'규획>은 17장에서 '해양의식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다루면서 해양의식·해양문화유산·해양문화산업에 관한 정책을 설계했다.<sup>7)</sup> 또한 2016년 국가해양국은 교육부·문화부·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문물국 등 교육문화 행정 부문과 공동으로 <전민 해양의식 선전교육과 문화건설 '135' 규획>을 발표하고 '해양문화' 건설의 방향과 목표, 주요 정책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sup>8)</sup> 다른 한편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2017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해양국은 공동으로 <'일대일로' 건설 해상합작 구상>을 발표하고 특별히 중국 해양문화의 대외정책 방향을 설계했다.<sup>9)</sup>

본 논문은 바로 21세기에 들어 중국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해양' 관련 정책 문건들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해양문화정책'의 프레임과 추진 방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비록 상술한 바와 같이 2012년 이후 중국 정부가 '해양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설계하기 시작했지만 필자가 보기에 중국의 '해양문화정책'은 정책 개념과 범주, 정책 목표와 정책 과제 간의 연계성, 그리고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있어서 극히 초보적 단계에 있고, 정책 내용들도 기타 여러 관련 정책 문건들 속에 산재해 있다. 때문에 우선 2장에서는 정책의 핵심

6) 이 외에도 大連海事大學航海歷史文化研究中心, 上海海事大學海洋經濟與文化研究中心, 福州大學閩商文化研究院, 廈門大學海洋文明與戰略發展研究中心 등이 설립되었다. 曲金良 主編, 『中國海洋文化發展報告』(2013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4. 참고.

7) 國家發改委·國土資源部·國家海洋局, 『國家海洋事業發展“十二五”規划』, 2012.

8) 國家海洋局·教育部·文化部·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國家文物局, 『全民海洋意識宣傳教育和文化建設“十三五”規划』, 2016.3.15.

9)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國家海洋局, 『“一帶一路”建設海上合作設想』, 2017.

개념인 해양문화, 해양문화산업 등을 해양사업, 해양경제, 해양산업 등 관련 정책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해양문화정책의 범주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21세기 이후 중국의 문화정책이 대체로 '문화사업정책'과 '문화산업정책'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양문화정책 역시 두 영역을 구별하여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해양문화정책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문화의 대외정책 부분을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중국 해양문화정책 범주 구성

중국 최초의 총체적인 해양정책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해양사업발전규획강요>(2008)는 '해양사업'을 "해양 자원·환경·생태·경제·안보 등 분야의 종합관리와 공공서비스 활동"으로 정의했는데, 이러한 규정은 2012년에 발표된 <국가해양사업발전'125'규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국가해양사업발전'125'규획>은 정책 범주를 다음과 같이 15개의 영역, 즉 해양자원의 관리, 해역의 집약적 이용, 섬 보호와 개발, 해양환경 보호, 해양생태 보호와 복원, 해양경제의 거시 조정, 해양공공서비스, 해양재난 방지, 해양권익 보호, 국제해양업무, 국제해역자원 조사와 극지연구, 해양과학기술, 해양교육과 인재양성, 해양 법률·법규, 해양의식과 문화 등으로 세분화 했다. 특히 이 문건은 처음으로 '해양문화'를 중국의 해양사업 관련 정책 범주의 하나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해양사업 정책은 주로 '해양경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2003년 국무원이 발표한 <전국해양경제발전규획강요>에서 '해양경제'는 "해양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각종 산업 및 관련 경제활동의 총화"로 정의되었다.<sup>10)</sup> 그리고 이 문건은 2010년까지 '해양산업'을 국민경제의 지주산업(支柱産業)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해양산

10) 國務院, 『全國海洋經濟發展規劃綱要』, 2003.5.9.

업'은 해양어업, 해양교통과 운수업, 해양원유가스업, 해변관광업, 해양선박공업, 해염 및 해양화 공업, 해수이용업, 해양생물의약품 등 8가지로 구성되었다.

한편 〈전국해양경제발전'125'규획〉(2012)과 〈전국해양경제발전'135'규획〉(2017)에서는 '해양산업'을 다시 ①해양전통산업, ②해양신흥산업, ③해양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해양서비스업에는 해양금융서비스업, 해양공공서비스업, 해운서비스업과 함께 해양관광업과 해양문화산업이 포함되어 있다.<sup>11)</sup> 그러니까 중국에서 해양관광이나 해양문화산업은 해양문화정책보다는 오히려 해양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정책 범주를 구성하고 있었다. '해양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한 〈국가해양사업발전'125'규획〉(2012)에서도 '해양문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책 범주로서 '해양문화'의 영역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해양문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중국문화부(中國文化部)보다는 주로 국가해양국에 의해 설계·추진되었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2016년에 발표된 〈전민 해양의식 선전교육과 문화건설 '135' 규획〉은 국가해양국이 교육부·문화부·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박물관 등 교육 및 문화 행정 부문과 함께 설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이 문건은 "국가의 해양전략은 반드시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현재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라는 전략 목표를 확정했는데 '해양문화'는 이러한 국가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 여론 환경, 사상적 기초, 그리고 정신적 동력을 제공하는데 그 정책적 함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①해양 선전, ②해양의식 교육, ③해양문화 건설 등 3대 주요 정책 범주를 설정하고 각각의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sup>12)</sup>

이렇게 보면 중국 정부가 인식하는 '해양문화'는 해양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개

11) '해양전통산업'에는 해양어업, 해양원유가스업, 해양선박공업, 해양염업 및 해양화공업, 해양교통운수업이 포함되어 있고, '해양신흥산업'에는 해양장비제조업, 해양약품과 생물 제품업, 해수이용업, 해양재생에너지업 등이 포함되었다. 國家發展改革委·國家海洋局, 『全國海洋經濟發展"十三五"規劃』, 2017.5.

12) 國家海洋局·教育部·文化部·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國家文物局, 『全民海洋意識宣傳教育和文化建設"十三五"規劃』, 2016.3.15. 참조.

념이라기보다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문화'의 일종, 즉 해양문화란 '해양'이 문화를 수식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정책 범주로 보자면 해양문화정책은 '문화정책'이라는 대범주 안에 속해 있는 '해양'이라는 특성을 지닌 하위범주에 해당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해양대학의 취진량(曲金良) 교수는 '중국해양문화'를 "중화민족이 해양과 관련하여 창조·전승한 물질적·정신적·제도적·사회적 문명생활방식 및 그 표현형태"라고 정의하고 하위범주로 해양정신 문화, 해양물질문화, 해양제도문화, 해양사회문화, 해양심미문화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sup>13)</sup>

중국 정부의 '해양문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해양문화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우선 '해양문화산업'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자. 취진량은 '해양문화산업'을 "해양문화를 주요 내용과 체제로 삼고, 해양 관련 업계·사회를 생산과 경영 주체 혹은 소비와 서비스 주체로 삼으며, 해안·섬·해저를 존재와 공간으로 삼는 문화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해양관광산업·해양레저산업·해양축제산업·해양미디어산업·해양공연산업·해양공예산업·해양서비스산업 등 7개로 분류했다.<sup>14)</sup> 한편 취홍량(曲鴻亮)은 '해양문화산업'을 "해양문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문화상품과 관련 서비스의 생산 및 해변(섬) 지역의 문화산업"으로 정의하고, 해양문화산업의 핵심 업종 역시 국가통계국이 지정한 문화산업 통계지표와 분류 표준을 근거로 9개로 분류했다.<sup>15)</sup> 장카이청(張開城)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①해양신문출판발행, ②해양방송영화, ③해양문예창작과 공연, ④해양문화정보전송, ⑤해양문화창의와 설계, ⑥해양문화레저오락, ⑦해양공예미술품 생산, ⑧해양전시, ⑨해양대형활동 등 9개를 '해양문화산업'의 주요 업종으로 분류했다.<sup>16)</sup>

상술한 바와 같이 '해양문화산업'은 일찍부터 '해양경제' 정책 영역에서 거론되

13) 曲金良 主編, 『中國海洋文化發展報告』(2013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4. 참조

14) 曲金良 主編, 『中國海洋文化發展報告』(2014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5. 참조.

15) 曲鴻亮, 「關於海洋文化產業的三個問題: 定義、核心行業與如何發展」, 『中國海洋經濟』 2016年第1期, 2016.

16) 張開城, 「海洋強國戰略背景下的海洋文化產業發展研究」, 『中國海洋經濟』 2016年第1期, 2016. 참조.

었고, 해양경제를 구성하는 ‘해양산업’의 하나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주요 해양 관련 정책 문건에는 ‘해양문화산업’의 업종별 분류와 그 특성에 따른 발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문건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양문화산업’에 대한 개념이나 업종에 대한 분류는 대체로 상술한 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전민 해양의식 선전교육과 문화건설 ‘135’ 계획>(2016)은 해양문화산업의 내용으로 해양 특색을 갖춘 문학예술, 음악·무용, 희극·공연, 서법·회화, 공예·미술, 광고, 동만·게임 등과 해양을 주제로 하는 영화·방송, 해양생태관광과 해양문화관광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문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가져오는 문제는 도대체 ‘해양문화정책’이 ‘문화정책’의 범주인지 아니면 ‘해양정책’의 범주인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정책 영역에서 ‘해양문화정책’의 주관 행정 부서가 어디여야 하는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해양문화’를 단순히 ‘해양+문화’로 이해하더라도 방점이 ‘해양’에 찍히느냐 ‘문화’에 찍히느냐에 따라 주관 행정 부서가 달라지게 되는데, 주무 부서의 위상과 전문성에 따라 관련 정책의 설계와 추진 방식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해양문화’ 관련 정책들이 주로 국가해양국의 명의로 발표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해양문화정책’은 국가해양국에 의해 주도적으로 설계·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중국문화부는 대체로 ‘해양문화’를 자신들의 중요한 정책 범주로 간주하지 않는 것 같다. 예컨대 2017년 중국문화부가 발표한 <‘135’시기 문화발전개혁규획>에는 ‘해양문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sup>17)</sup>, 2018년 역시 중국문화부가 발간한 <‘135’문화발전개혁규획회편>에는 ‘135’시기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중요한 문화정책 문건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해양문화’와 관련된 문건은 눈에 띄지 않는다. 다시 말해 중국문화부는 예술창작, 문화과학기술, 문화산업, 공공도서관, 공공디지털문화, 군중문예, 전통공예, 신문출판방송, 국가문물, 저작권 사업 등과 관련하여 부문별 정책들을 설계했지만 ‘해양문화’는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주요

17) 中國文化部, 『文化部‘十三五’時期文化發展改革規劃』, 2017.2.

지방 정부의 문화정책 설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sup>18)</sup>

결국 2013년을 전후로 중국 정부는 '해양강국 건설'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라는 국가 전략 목표를 설정했지만 정책 범주로서 '해양문화'는 국가해양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해양사업'의 하위범주로 취급될 뿐이고, 중국문화부를 위시한 문화·관광·미디어·출판 관련 행정 부분에서는 특별한 정책 범주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비록 <전민 해양의식 선전교육과 문화건설 '135' 계획>(2016)에서 해양문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선전·교육·문화·신문출판방송·문물 등의 행정 부문 및 공청단·문학예술계연합(文聯)·작가협회(作協)·기자협회(記協) 등 단체들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며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협력 사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 3. 중국 해양문화사업 정책 방향

중국의 '해양문화정책'에서 '해양문화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정책, 즉 '해양문화사업' 정책의 설계와 추진 방향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해양의식'을 확대시키는데 집중되어 있다. <국가해양사업발전규획강요>(2008)는 추진계획의 하나로 '전 국민의 해양의식 증강'을 설정하고 있고, <국가해양사업발전'125'규획>(2012)은 '전 사회 해양의식의 보편적 증강'을 정책 목표의 하나로 설정했다. 그리고 2014년 중공중앙선전부는 <전 국민의 해양의식 향상에 관한 선전교육공작방안>과 <해양의식 제고와 해권 교육 강화에 관한 공작방안>을 연이어 발표했다.<sup>19)</sup> 이러한 정책 목표와 방향의 설정은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해양강국 건설'이나 '21세기 해상실크로드'와 같은 전략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정도가 대단히 낮으며, 해양의식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여건 또한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8) 中國文化部政策法規司 編, 『十三五時期文化發展改革規劃匯編』, 2018.2.

19) 中宣部, 『關於提升全民海洋意識宣傳教育工作方案』, 『關於提高海洋意識加強海權教育的工作方案』 참조.

사실 고대부터 중국은 해양과 상업보다는 육지와 농업을 중시했던 국가였고, 특히 명 중기 이후 청대까지 지속된 강력한 해금(海禁)정책은 해양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의 이러한 해양의식은 20세기까지도 지속되었는데, 1970년대만 해도 중국 정부는 주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한 영토 문제 외에 해상지역이나 해저자원 등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sup>20)</sup> 이렇게 형성된 중국해양문화의 특성에 대해 어떤 연구자들은 ‘농업성’을 구비한 ‘남색 문화’ 즉 ‘해양농업문화(以海爲田)’로 규정하고 서구의 ‘해양상업문화’와 대비하기도 하였다.<sup>21)</sup> 다큐멘터리 <하상>이 중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해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21세기 중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은 주로 해양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를 선도한 것은 해양에 근거한 항구 도시들이었고, 중국 무역의 95% 이상이 해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해양영토를 둘러싼 새로운 분쟁뿐만 아니라 해양자원과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위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해양강국’을 새로운 국가 전략 목표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대내외적 배경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러한 목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가 없으면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국가해양국이 국민들에 대한 ‘해양의식’의 보급과 교육을 위해 2010년 ‘국가해양국선전교육센터(國家海洋局宣傳教育中心)’를 설립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 때문이었다.<sup>22)</sup>

20) 명 嘉靖년간(1522~1566)에는 조그만 배도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시켰고, 청대에는 遷海令을 반포하여 복건, 광둥, 강소, 절강 연해의 주민을 내지로 50리 이주하도록 강제했다. 박정현, 「근대 중국의 해양인식과 영유권 분쟁」, 『아세아연구』 4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5. 참조.

21) 宋正海, 『東方藍色文化-中國海洋文化傳統』, 廣東教育出版社, 1995. 참조.

22) 國家海洋局宣傳教育中心은 2010년 설립된 국가해양국 직속의 사업단위다. 주요 기능은 ① 해양선전교육 관련 정책·계획·표준·규범의 제정과 실시, ② 해양의식·해양정책·법률법규의 보급과 선전교육, ③ 세계해양일·‘전국해양선전일’ 등 전국적 해양선전교육 활동, ④ 전국 해양문화 선전교육서비스 시스템 및 국가급 해양의식선전교육기지 건설, ⑤ 해양선전교육 정보화 건설 및 통계·감측·이론 연구, ⑥ 해양문화창의산업 발전 추동 등이다.

물론 2000년대 이후 중국에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각종 시설과 연구기구가 지속적으로 설립되었고 다양한 활동도 진행되었다. 예컨대 2015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는 해양박물관이 68개(연해지역에 51개, 내륙지역에 17개)가 있고,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해양문화축제도 52개가 있으며, '해양문화'를 명칭으로 쓰고 있는 문화연구기구가 34개, 해양문화연구회 26개, 전국해양의식교육기지 2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해양국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중국 국민의 해양의식 종합지수는 56.2(지수 구간은 0~100)였는데, 이것은 비록 2010년의 47.9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sup>24)</sup> 그리고 이러한 진단을 기초로 국가해양국은 2016년 <전민 해양의식 선전교육과 문화건설 '135'규획>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해양에 관한 '선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해양 미디어 역량' 강화와 '해양의식의 대중전파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정책 과제를 설정했다.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미디어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①해양 관련 언론 보도의 확대<sup>25)</sup>, ②해양 미디어의 혁신<sup>26)</sup>, ③해양 뉴미디어 선전 플랫폼 건설, ④해양 관련 정부 정보 공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중전파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①해양을 주제로 하는 브랜드 건설<sup>27)</sup>, ②고품질의 특색 있는 해양문화축제 등을 개최하며, ③우수 해양문예 작품, 특히 무대예술·미술사진·영상·문예도서·인문사회과학 등의 우수한 작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 등이 제시

23) 于鳳·王穎, 「我國海洋文化事業發展現狀和建設研究」, 『海洋開發與管理』 2017年第8期, 2017. 참조.

24) 國家海洋局·教育部·文化部·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國家文物局, 『全民海洋意識宣傳教育和文化建設「十三五」規劃』, 2016.3.15. 참조.

25) 주로 해양 관련 중요 정책·법규·계획과 해양과학기술의 성과, 중요한 회의 및 중점 프로젝트, 각 지역의 우수 사례, 중점 도서와 영상작품·문예공연, 대형 해양활동 등에 대한 언론 보도 확대를 말한다.

26)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융합, 해양 주제의 TV프로그램 제작, 해양 특색의 작품 방영, 인터넷방송을 통한 교류 강화 등을 의미한다.

27) '세계해양의 날'이나 '전국해양선전의 날'과 같은 중요한 해양 선전 활동의 브랜드화, 전국 대학생 해양지식 경연대회·해양문화창의설계 경연대회 등 개최, '해양문화장랑(海洋文化長廊)' 건설, 전국 규모의 해양의식 보급 플랫폼 건설 등을 말한다.

되었다.

둘째는 해양의식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기초지식 교육'과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 해양의식 향상'이 정책 과제로 설정되었다. 우선 '해양 기초지식 교육'과 관련하여 ①초·중학교 교과 과정을 개편하여 해양과 관련된 지리·역사·도덕·생물·환경·재해·정책·권익·인문 등의 내용을 삽입하고, ②해양 특색의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온라인, 게임 등)을 새롭게 개발하며, ③'전국해양의식교육기지'의 구축, 학생들에게 각종 해양연구소·실험실·전시관·과학기술관 등의 개방, 해양과 멀리 떨어진 내륙 지방에 해양 관련 도서와 영상자료 보급, 해양 관련 각종 청소년 활동 조직, '해양 지식교육시범학교'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④대학에는 해양학과 설립을 비롯하여 해양 관련 전공과 커리큘럼 개설, 대학생 동아리나 해양 자원봉사자 조직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대중 해양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①국민 해양의식 사회교육의 전개, 특히 당정 간부·해양 관련 기업·사회 대중을 위한 순회강연 및 각종 보고회를 조직하고, ②해양의식 선전지원자 조직, 해양지식 보급을 위한 서적·사진·선전책자 등 출판, 박물관·도서관·문화관·과학기술관·소년궁·기념관·군사관 등에서 해양 관련 전람회 개최, 해양을 주제로 한 우수 영상작품을 제작·방영하도록 제안했다.

셋째는 '해양문화'의 건설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①해안 지역에 공공문화서비스 설비, 즉 해양 박물관·문화관·과학기술관·전람관 등 건설, 지역 특색을 선명하게 갖춘 해양도시 이미지 식별 시스템 구축, 3D·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중국해양디지털박물관' 건설, 대중들이 참여하는 각종 해양문화 활동 전개,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보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②해양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 특색의 문화상품과 서비스 개발, 문화기업 발전 촉진, 문화산업 플랫폼 건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상과 같은 사업을 통해 '135'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핵심 정책 과제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표-1〉 국민 해양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와 정책목표

정책 과제	정책 목표
해양 선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성 신문, 잡지, 방송TV, 인터넷뉴스 등 미디어에 해양관련 내용이 전방위적으로 보도되도록 함</li> <li>○ 〈중국해양보〉와 같은 해양 전문 미디어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한층 계고하여 전 국민의 해양의식을 명확히 향상시킴</li> </ul>
해양의식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개의 전국해양의식교육기지, 200개의 전국해양과학보급교 육기지, 100개의 해양지식교육시범학교를 건설하고, 특히 서부 지역의 각 성에 6~10개의 해양의식과 과학보급교육기지 건립</li> <li>○ '135'기간 매년 2개의 내륙 성을 선택하여 해양지식 활동을 전개하고, 각 성은 2~5개 시를 선택하여 해양지식보급 활동을, 각 시·현은 초·중학교 각 5개씩 선발하여 해양지식 강좌·도서 보급 활동을 전개</li> </ul>
해양문화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관련 문화도서 출판량을 매년 20% 성장시켜 총 400종의 서적 출판, 200만 권 발행을 달성함</li> <li>○ 매년 우수한 해양 제재의 문화상품, 즉 영상작품·회곡·문학 작품·음악무용·동만게임 등을 추천함</li> </ul>

이처럼 중국의 '해양문화사업정책'은 '해양의식'의 보급과 확산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해양의식 선전 수단(전통미디어+뉴미디어)의 역량 강화와 선전 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학교와 사회의 해양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문예작품의 창작을 독려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축제와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해양문화의 대중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해양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내륙지역까지 '해양의식'을 전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설계는 동시에 중국의 '해양문화 정책'이 극히 초기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4. 중국 해양문화산업 정책 방향

2000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화산업'이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시작된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 설계는 단순히 문화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넘어서 그것이 중국의 산업구조 혁신, 즉 중국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전략적 의미를 부여받았다.<sup>28)</sup> 중국의 '해양문화산업'이 갖는 의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장카이청(張開城)은 해양문화산업의 발전이 현 단계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고,<sup>29)</sup> 쑤지팅(孫吉亭) 역시 중국경제의 '신구동력 전환(新舊動能轉換)'이라는 각도에서 해양문화산업이 해양경제의 신구동력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했다.<sup>30)</sup> 한편 중국 정부는 2017년 <서비스업창신발전대강(2017-2025년)>을 발표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 정책을 설계했는데, 이 가운데 '해양서비스' 발전은 주요한 정책 과제의 하나였고 그 속에는 '해양문화산업'이 포함되어 있었다.<sup>31)</sup>

중국의 해양문화산업정책 설계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초기부터 가장 주목했던 영역은 바로 '해양관광업'이었다. <전국해양경제발전규획강요>(2003)는 해양문화 산업과 관련된 업종으로는 유일하게 '해변관광(濱海旅游)'만을 언급하고 있고, <전국해양경제발전135'규획>(2017)은 해양문화산업과 함께 '해양관광업'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무엇보다 '해양관광업'이 중국의 해양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이른바 해양경제의 지주산업(支柱產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해변관광업' 생산액은 6258억(2011년), 6972억(2012년), 7851억(2013년), 8882억(2014년) 위안(元)으로 해양산업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3.4%, 33.9%, 34.6%, 35.3%에 달했다.<sup>32)</sup> 그리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8.3%가 증가한 1조6078억 위안으로

28) 권기영, 「21세기 중국의 국가비전과 문화산업 발전 전략」, 『현대중국연구』 제14집 1호, 현대중국학회, 2012. 273-275쪽.

29) 張開城, 「海洋強國戰略背景下的海洋文化產業發展研究」, 『中國海洋經濟』 2016年第1期總第1期, 2016.

30) 2015년李克強 총리가 '新舊動能'의 개념을 제출한 이후 2017년 1월 국무원은 <關於創新管理優化服務培育壯大經濟發展新動能加快新舊動能接續轉換的意見>을 발표했다. 소위 '新舊動能轉換'이란 현 단계 중국 경제발전 상황에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동력을 배양·발전시키고와 함께 낙후된 구동력을 개조·도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孫吉亭, 「發展海洋文化產業推動海洋經濟新舊動能轉換的路徑選擇」, 『中國文化論衡』 2018年 第2期 總第6期, 2018. 참조.

31) 國家發展改革委, 『服務業創新發展大綱(2017-2025)』, 2017.6.21. 참조.

32) 張開城, 「海洋強國戰略背景下的海洋文化產業發展研究」, 『中國海洋經濟』 2016年第1期總第1期, 2016. 참조

전체 해양산업 생산총액의 47.8%를 점유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sup>33)</sup>

〈전국해양경제발전135'규획〉(2017)에 따르면 '해양관광업' 발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은 우선 관광·휴가·레저·오락·해상스포츠가 결합된 해양관광, 특히 생태관광·휴가양생·해양과학보급 등을 위주로 하는 '해양생태관광'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해변경관 환경 개선, 섬 관광 목적지 건설, 레저·휴가·양생기지 건설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선전(深圳), 칭다오(青島), 푸저우(福州), 다롄(大連) 등에 '중국 크루즈관광 발전 실험구(中國郵輪旅游發展實驗區)'를 건설하고 비자 면제 등 출입국 관리 모델을 혁신하며, 해양도시에 '유람선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해양체육센터(海洋体育中心)'와 '해상스포츠산업기지(海上運動產業基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테마파크(主題公園)'는 '관광+문화+체험'이 일체화된 신형 관광상품으로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 AECOM은 〈2015 중국 테마파크 발전보고〉에서 2020년 중국의 테마파크 방문객은 약 2.21억 명으로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테마파크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sup>34)</sup> 중국 정부 역시 해양문화를 주제로 최신 과학기술을 융합한 종합형 '해양테마파크' 건설을 중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5년에 착공하여 2018년 11월에 개장한 상하이의 '해창해양공원(海昌海洋公園)'이다. 총면적 29.7헥타르에 건설된 이 해양테마파크는 5개의 테마구역, 6개의 전시관, 9개의 공연 프로그램, 6대 놀이기구, 360도 스크린 영화관 및 4D영화관, 테마식당, 9개의 특색 매장, 호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해양의식교육기지', '전국해양과학보급교육기지', '생명장강연구와 과학보급기지'로 선정되었다.<sup>35)</sup>

사실 해양관광업은 현재 중국 대부분의 해양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2012년 국무원이 비준한 〈전국해양기능구역(2011-2020)〉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동부 해안 지역을 기능별로 8개의 구역으로 구분했는데, 이 가운데

33) 自然資源部海洋戰略規劃與經濟司, 『2018年中國海洋經濟統計公報』, 2019.4. 참고.

34) 戴靖怡, 「產業鏈視角下我國海洋主題公園的發展路徑研究」, 『特區經濟』, 2019.

35) 全國海洋意識教育基地는 國家海洋局宣傳教育中心이, 全國海洋科普教育基地는 中國海洋學會가, 그리고 生命長江研究和科普基地는 中國水產科學研究院東海水產研究所에서 지정한 것이다. <https://baike.baidu.com/item/上海海昌海洋公園/22517610?fr=aladdin>

데 해양 관광자원 개발 및 이용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레저·오락지구(旅游休閒娛樂區)’로 지정하고 주변의 국가급 풍경명승구·관광리조트·지질공원·산림공원 등과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sup>36)</sup> 또한 <전국해양경제발전135규획>(2017)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해양관광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표-2〉 중국 해양경제권의 해양관광 발전 계획

해양경제권	주요 지역	해양관광 관련 계획
북부해양 경제권	요녕반도	· 동북아 국제해양해도관광, 해변피서관광구, 동북아 크루즈관광기지 건설
	발해만 연안	· 첨단관광, 북방 국제 크루즈관광 중심(친진), 국가 해양문화 전시클러스터
	산둥반도 연안	· 국제 해변레저리조트, 크루즈 유람선, 해상스포츠 등 첨단 해양관광 발전
동부해양 경제권	강소 연안	· 동부관광신기지 및 생태테저관광벨트 육성, 해양문화창의산업, 해양관광업 발전
	상해 연안	· 크루즈 유람선 경제
	절강 연안	· 해양문화제, 국제적 해양문화레저관광목적지
남부해양 경제권	복건 연안	· 해상실크로드관광, 해협관광, 크루즈관광
	주강삼각주	· 해상스포츠, 크루즈관광, 해상실크로드관광
	광서북부만	· 중국-아세안 해양관광합작권 구축
	해남도	· 해변관광, 크루즈·범선·유람선 관광
섬 개발과 보호	절강舟山群島新区	· 해양관광업 발전
	복건平潭综合实验区	· 섬 관광레저 목적지
	광둥橫琴島	· 국제 비즈니스서비스 레저관광기지 건설

그러나 해양관광 외에 해양문화산업과 관련된 업종별 정책은 별도로 설계되지는 않았다. 이것 역시 중국 정부가 해양문화산업이 ‘해양’이라는 주제 혹은 제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 일반적인 문화산업 정책 설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정책적 측면에서 보자면 건강한 문화산업 생태계의 조성, 콘텐츠 창작-유통-소비 환경의 개선, 지역 특색의 문화자원 발굴, 문화산업

36) 8대 해양기능구는 ①농어업구, ②항구운송구, ③공업·도시용 해구, ④광산·에너지구, ⑤관광레저오락구, ⑥해양보호구, ⑦특수이용구, ⑧개발보류구 등이다. 「전국해양기능구획(2011~2020)의 주요 내용」,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3. 22. 참조.

인재양성, 문화산업 금융서비스 혁신 등 중국문화부가 중심이 되어 설계·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해양문화산업'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동부 연해의 해양도시를 중심으로 '해양문화산업 클러스터'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절강성 앞바다의 섬들로 구성된 '저우산군도(舟山群島)'였다. 2011년 중국 국무원은 '저우산군도신구(舟山群島新區)'의 설립을 비준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최초로 '해양경제'를 중심으로 건설되는 개발구로서 상하이푸동신구(上海浦東新區), 톈진빈하이신구(天津濱海新區), 충칭량장신구(重慶兩江新區)에 이른 또 하나의 국가급 신구(新區)가 되었다.<sup>37)</sup> 또한 2015년부터 국가해양국은 '전국해양문화산업시범기지(全國海洋文化產業示范基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sup>38)</sup>, <전국해양경제발전135'규획>(2017)에서는 해양전통문화자원에 근거한 '해양 특색 문화산업벨트(海洋特色文化產業帶)'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15년 중국문화미디어그룹(中國文化傳媒集團, China culture media group)은 중국공상은행 복건성 지점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중국해양문화센터'와 '해상실크로드 예술구' 건설에 50억 위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sup>39)</sup>

이처럼 중국의 해양문화산업정책 설계는 '해양관광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색의 해양문화자원을 산업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37) 2013년에는 해양경제와 관련된 국가급 전략 계획의 하나인 <절강저우산군도신구발전규획(浙江舟山群島新區發展規劃)>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舟山市 역시 자체적으로 <舟山市普陀區文化產業發展規劃(2016-2025)>을 수립하고 해양관광, 해양문화축제, 해양문화창의원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8) 國家海洋局宣傳教育中心은 2015년 1차로 6개의 단위를 '전국해양문화산업시범기지'로 지정했다. 이 6개 기지는 中國科學院青島科學藝術研究院(해양디지털화), 寧波影視文化產業區管委會暨寧波象山影視城(해양영상), 浙江大學中國海洋文化傳播研究中心(해양전파), 三亞學院(해양미술), 中國對外翻譯出版有限公司(해양도서출판), 廣東海洋大學珍珠研究所暨廣東紹河珍珠有限公司(진주문화) 등이다. 국가해양국은 2016년까지 총 21개의 전국해양문화산업시범기지를 지정했다.

39) 복건성 평탄다오(平潭島)에 건설될 '中國海洋文化中心'은 용지면적 약 120,000m<sup>2</sup>의 프로젝트로서 대형 공연센터, 국제예술품교류센터 등 국가급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복건성 자유무역지대에 건설될 '海上絲綢之路藝術區'는 용지면적 약 333,500m<sup>2</sup>의 프로젝트로서 해상실크로드 예술관, 공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국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상' 추진 동향과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2.27. 참고.

이를 위해 해양문화콘텐츠 개발, 다양한 해양문화축제 개최, 해양문화기업 육성, 해양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정부는 해양문화산업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의 해양문화산업정책은 그동안 중국문화부가 설계했던 문화산업정책의 구조 및 범주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정책 주무 부서인 국가해양국이 '해양문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해양문화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나 해양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정책도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양문화산업 역시 해양·문화·미디어·관광·체육·교육·재정·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행정 부문 간 조정과 협력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해양국이 주도하는 해양문화산업정책에 중국문화부와 같이 상급 부서이면서 문화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 5. 중국 해양문화 대외정책 방향

중국의 해양문화정책에서 별도로 대외정책 부분을 살피는 것은 그것이 '일대일로'의 하나인 '21세기 해상실크로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한 이래 중국 정부는 2015년 이른바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을 발표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원칙, 국가간 합작의 중점 내용 및 미래 비전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sup>40)</sup> 특히 이 문건은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5개의 합작 중점(五通)<sup>41)</sup>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민심상통(People-to-people bond)은 '일대일로' 건설의 사회적 기초(public

40) 國家發展改革委·外交部·商務部, 『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이하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이라 칭함), 2015.3.28.

41) 政策溝通, 設施聯通, 貿易暢通, 資金融通, 民心相通 5가지를 말함.

support)로서 다양한 문화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근거하여 중국문화부 역시 2017년 발표한 <‘일대일로’ 문화발전 행동계획(2016-2020)>을 통해 ①합작 메커니즘 구축, ②합작 플랫폼 건설, ⑧합작 브랜드 형성 등 3개의 정책 범주를 설계하고 각각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sup>42)</sup>

한편 2017년 국가해양국은 ‘일대일로’ 가운데 특별히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과 관련하여 <‘일대일로’ 건설 해상 합작 구상>을 발표했다.<sup>43)</sup> 이 문건에 따르면 ‘일로(一路)’는 크게 세 개의 루트로 구성된다. 첫째는 중국-인도양-아프리카-지중해로 이어지는 해양경제루트(藍色經濟通道)이고, 둘째는 중국-오세아니아-남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루트, 그리고 셋째는 중국-북극해-유럽으로 이어지는 루트이다. 그리고 이러한 루트의 중국 내 거점도시들은 바로 개혁개방의 상징이자 중국 경제발전을 선도했던 동부의 연해 도시들이었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중점 방향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주요 거점도시<sup>44)</sup>

<‘일대일로’ 건설 해상 합작 구상>(2017)에서 ‘해양문화’와 관련된 정책은 우선 ‘해양인식’의 확대와 함께 국가 간 해양 합작을 위한 민의기초(民意基礎) 정립을 목표로 ‘해양지식과 문화교류 융통계획(海洋知識與文化交流融通計劃)’, ‘세계마

42) 이에 관해서는 권기영, 「중국 ‘일대일로’ 문화정책 5년의 성과와 과제」, 『중앙사론』 제48집, 중앙사학연구소, 2018.2. 참조.

43)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國家海洋局, 『“一帶一路”建設海上合作設想』, 2017.6.19.

44) 김수환·유다영, 「일대일로 권역별 거점도시 역량 분석」, 『INChinaBrief』, 인천발전연구원, 2016.10.24. 4쪽

조해양문화센터(世界媽祖海洋文化中心建設) 설립, 해당 국가들과 해양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 및 '해양예술제' 등의 행사 개최와 함께 특별히 해양문화 전과를 위한 미디어 분야의 합작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술한 바 있는 다양한 해양 관련 정책 문건이나 중국문화부가 발표한 문화정책 문건 속에도 '해양문화'의 대외정책에 관한 내용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정책 설계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첫째, '해양문화'와 관련된 국제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이다. 예를 들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해당국 고위급 대화 메커니즘' 건립이나 '중국-군소도서개발국(SIDS)<sup>45)</sup> 해양장관 원탁회의' 개최, '중국-아세안 해양합작센터' 등 정부 간 협력 메커니즘을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문화와 관련된 교류와 합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계획을 제안했다. 더불어 '중국-아세안 해상합작기금'이나 '중국-인도네시아 해상합작기금', 그리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등의 자금을 활용하여 '해양문화와 관련된 합작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메커니즘 구축도 제안하고 있다.

둘째, '해양문화' 국제교류 플랫폼의 건설이다. 2014년부터 복건성 환저우(泉州)에서 개최하기 시작한 '해상실크로드 국제예술제'<sup>46)</sup>, 그리고 '샤먼국제해양주간(廈門國際海洋周)<sup>47)</sup>이나 '중국해양문화제(中國海洋文化節)<sup>48)</sup> 등 문화예술 교류 플랫폼과 함께 전통 해양문화의 발굴과 보호 측면에서 '세계마조해양문화(世

45)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SIDS, 군소도서개발국) ; 현재 유엔사무국은 카리브해, 태평양, 아프리카, 인도양, 지중해, 남중국해 등에 산재해 있는 군소도서개발국 52개국을 수록하고 있다. <위키백과> 검색.

46) 海上絲綢之路國際藝術節(Maritime Silk Road International Arts Festival)는 중국문화부와 복건성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2년에 1회 개최하며, 2014년 제1회 예술제에는 문예 공연, 전시, 학술포럼, 문화유산 등 23개 항목의 행사가 진행되었고, 일본·말레이시아·인도 등 20여 개 국가가 참여하였다.

47) 中國國家海洋局、廈門市人民政府、聯合國開發計劃署駐華代表處、東亞海域環境管理區域項目組織、廈門大學 등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국제해양포럼, 해양테마전시, 해양문화활동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012년 행사에는 50여 개 국가 및 10여 개 국제조직이 참가하였다.

48) 中國海洋學會、中國海洋報社、浙江海洋學院 등이 공동 주최하고 절강성 舟山市 岱山縣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학술연구와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界媽祖海洋文化)포럼' 개최나 '세계마조해양문화센터' 건설도 제안하고 있다.<sup>49)</sup>

셋째, 해양문화산업의 국제협력 추진이다. 우선 '해양관광' 분야에서 '중국-아세안 해양관광협력권(中國-東盟海洋旅游合作圈)' 구축<sup>50)</sup> 등 주변국들과 해양관광 노선을 개발하고 관광정보를 교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미디어 영역에서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미디어 동아리(21世紀海上絲綢之路媒体朋友圈)' 구축 등을 통해 공동으로 해양문화 전파를 추진하고, 전파방식 또한 다국문명과 다국어를 체현·융합한 형태로 혁신할 것을 제안하였다.<sup>51)</sup>

한편 영상콘텐츠 분야에서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실크로드 영상브리징 공정(絲綢之路影視橋工程, Silk road film bridge project)'이 눈에 띈다. 물론 이 공정은 '해양문화만이 아니라 '일대일로' 전체를 제재로 하는 영화·TV프로그램·다큐멘터리의 프로모션 및 공동제작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이지만 중국 해양문화의 대외교류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예컨대 2014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실크로드 국제영화제(SILK ROAD INTERNATIONAL FILM FESTIVAL)'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의 중심 도시인 시안(西安)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의 중심 도시 '푸저우(福州)'에서 해마다 번갈아 개최하고 있는데, 특히 2017년 푸저우에서 개최된 제4회 영화제는 '해양실크로드·해양·해협(海絲、海洋、海峽)'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실크로드TV국제협력공동체(絲路電視國際合作共同体)'나 '일대일로신문협력연맹(一帶一路新聞合作聯盟)' 등의 미디어 교류 플랫폼 구축도 이 공정에 포함되어 있다.<sup>52)</sup>

이처럼 중국의 해양문화 대외정책은 크게 3개의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설계의 핵심 목표는 바로 중국의 해양문화를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주

49) 마조 신앙과 마조 풍속은 2009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고, 해외 각지의 화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재 26개국에 1,500개에 달하는 媽祖廟가 있다. (바이두 검색)

50) 國家發展改革委·國家海洋局, 『全國海洋經濟發展“十三五”規劃』, 2017.5.

51)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國家海洋局, 『“一帶一路”建設海上合作設想』, 2017.6.19.

52) 2017년 5월 11일 國務院新聞辦公室에서 개최된 '推進與“一帶一路”沿線國家民心相通情況發布會'에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부부장 長童剛 기자회견 참고, <http://www.scio.gov.cn/xwfbh/xwfbh/wqfbh/35861/36653/zy36657/Document/1551636/1551636.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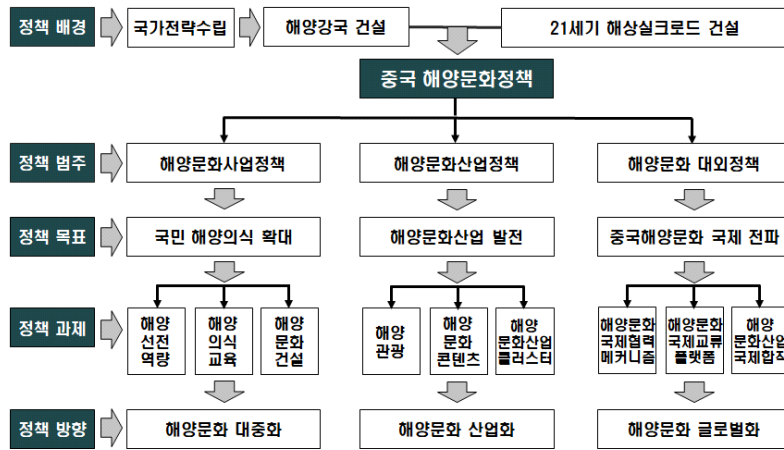
변 국가에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해양강국'으로서의 중국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었다. 때문에 상술한 바와 같은 해양문화 국제교류 플랫폼 건설이나 해양문화산업의 국제협작 역시 중국 주도 하에 중국의 메시지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전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중국이 전파하고자 하는 '중국해양문화'의 정신과 이념이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기타 '해양강국'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대외전파 방식은 적절한 것인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정신으로 평화·신뢰(互信)·협작·혁신·공영(共贏)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왜 다른 국가 및 지역의 '해양문화'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 설계는 하지 않는지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해양문화의 전파에 있어서 대외적 전파와 대내적 전파의 전략과 방침에 구별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나,<sup>53)</sup> 국제사회의 문화전파의 이념과 여전히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중국 미디어의 문화전파 방식에 대한 비판<sup>54)</sup> 등은 심각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된다.

## 6. 결론

중국 정부가 '해양강국' 건설을 국가 목표로 설정한 이래 중국 정부가 설계한 중국해양문화정책은 크게 해양문화사업정책, 해양문화산업정책, 해양문화 대외정책 등 3개의 정책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정책 문건들에 산재해 있는 이러한 해양문화정책을 이와 같은 정책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정책 목적, 정책 과제, 정책 방향 등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3) 杜娟娟, 「“一帶一路”背景下中國海洋文化傳播的頂層規劃與策略研究」, 『新聞傳播』, 2018.6.

54) 楊威, 「“一帶一路”視閥下中國海洋文化國際傳播路徑探析」, 『湖湘論壇』2019年1期, 2019.



〈그림-1〉 중국 해양문화정책 구성도

이렇게 볼 때 중국의 해양문화정책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중국해양문화의 ①대중화, ②산업화, ③글로벌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해양문화정책이 아직은 초보적 단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술한 바 있는 분야별 정책 과제와 주요 사업 내용 역시 이러한 단계적 특성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중국 해양문화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정책 내용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주체의 문제에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만일 '해양문화정책'의 주무부서가 국가해양국이라면, '해양문화'는 '해양사업'의 일부로 취급될 뿐이며, 이것은 '해양문화'의 발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해양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 동시에 국가해양국은 1998년 이후에는 국토자원부(國土資源部) 산하의,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자연자원부(自然資源部)에 소속된 하나의 국(局)에 불과하다. 문화와 관광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중국문화관광부(中國文化和旅遊部)와 비교한다면 국가해양국은 행정 부처로서 위상과 규모,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에 관한 전문성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국가해양국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중국문화관광부는 그동안 '해양문화정책'에 관해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중

국의 '해양문화정책'은 마야호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이러한 중국 해양문화정책의 특성은 우리나라와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은 듯 보인다. 2013년 재출범한 해양수산부는 2016년 '해양 르네상스 실현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과 함께 '해양교육의 내실화와 해양문화 확산'을 중점 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해양수산정책을 보면 크게 해양정책, 수산정책, 해운물류정책, 해사안전정책, 항만정책 등 5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양문화'와 관련된 정책은 해양정책실 산하 해양산업정책관에 소속되어 있는 해양정책과(해양문화행사)와 해양레저관광과에서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도 국립해양박물관 정도를 제외하면 '해양문화'와 관련된 전문기관은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해양문화'는 별도의 정책 범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양문화'가 하나의 정책 범주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필자가 중국의 '해양문화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해양'을 국가 전략 목표로 설정했고, '21세기 해상실크로드'와 같은 국제적 비전과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환황해 경제벨트'와 '환동해 경제벨트'는 '해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대외전략의 하나인 '신남방 정책' 역시 '해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2020년 1월 9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슷한 시기 한국과 중국의 국가 전략에서 '해양'이 갈수록 부각되는 상황에서 '해양문화'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 구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로 취급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국의 정책 설계와 추진 전략이 상호 참조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한국 참고자료】

- 김수한·유다영, 「일대일로 권역별 거점도시 역량 분석」, 『INChinaBrief』, 인천발전연구원, 2016.10.24.
- 박정현, 「근대 중국의 해양인식과 영유권 분쟁」, 『아세아연구』48,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5.
- 蘇曉康·王魯湘 지, 洪熹 역, 『하상』, 동문선, 1989.
- 이주호 외,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 「중국 해양경제의 발전 현황과 문제점」,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12.30.
-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현황 및 평가와 전망」,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5.12.
- 홍장원 외, 『해양문화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 【중국 주요 정책문건】(연도순)

- 国务院, 『全国海洋经济发展规划纲要』, 2003.5.9.
- 国务院, 『国家海洋事业发展规划纲要』, 2008.
- 国家发改委·国土资源部·国家海洋局, 『国家海洋事业发展“十二五”规划』, 2012.
- 国务院, 『全国海洋功能区划(2011年~2020年)』, 2012.
- 中宣部, 『关于提升全民海洋意识宣传教育工作方案』, 2012.
- 中宣部, 『关于提高海洋意识加强海权教育的工作方案』, 2012.
- 国家发改委·国土资源部·国家海洋局, 『国家海洋事业发展“十二五”规划』, 2012.
- 国务院, 『关于加快发展对外文化贸易的意见』, 2014.3.3.
- 国家发展改革委·外交部·商务部,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2015.3.28.
- 国务院, 『全国海洋主体功能区规划』, 2015.8.1.
- 国家海洋局·教育部·文化部·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国家文物局, 『全民海洋意识宣传教育和文化建设十三五规划』, 2016.3.15.
- 文化部·商务部等, 『开拓海外文化市场行动计划(2016—2020年)』, 2016.
- 國務院, 『海外中国文化中心发展规划(2012—2020年)』, 2016.
- 国务院, 『“十三五”旅游业发展规划』, 2016.12.7.

- 文化部,『“一带一路”文化发展行动计划』,2017.1.6.
- 文化部,『“十三五”时期文化发展改革规划』,2017.2.23.
- 国家文物局,『国家文物事业发展“十三五”规划』,2017.2.
- 文化部,『“十三五”时期文化产业发展规划』,2017.4.19.
- 中共中央·国务院,『国家“十三五”时期文化发展改革规划纲要』,2017.5.7.
- 国家发展改革委·国家海洋局,『全国海洋经济发展“十三五”规划』,2017.5.
- 国家发展改革委·国家海洋局,『“一带一路”建设海上合作设想』,2017.6.19.
- 国家发展改革委,『服务业创新发展大纲(2017-2025)』,2017.6.21.
- 文化部,『“十三五”时期对外和对港澳台文化工作规划』,2017.7.
- 中國文化部政策法規司 編,『“十三五”时期文化發展改革規劃匯編』,2018.2.
- 自然资源部海洋战略规划与经济司,『2018年中国海洋经济统计公报』,2019.4.

【중국 참고자료】

- 曲金良 主編,『中國海洋文化發展報告』(2014年券),社會科學文獻出版社,2015.
- 曲鴻亮,「关于海洋文化产业的三个问题:定义、核心行业与如何发展」,『中国海洋经济』2016年第1期,2016.
- 戴清怡,「产业链视角下我国海洋主题公园的发展路径研究」,『特區經濟』,2019.
- 杜娟娟,「“一带一路”背景下中国海洋文化传播的顶层规划与策略研究」,『新聞傳播』,2018.
- 徐文玉,「海洋文化产业主体系统及其协同关系研究」,『中国海洋经济』2018年第2期总第6期,2018.
- 孙吉亭,「发展海洋文化产业推动海洋经济新旧动能转换的路径选择」,『中国文化论衡』2018年第2期总第6期,2018.
- 宋正海,『東方藍色文化-中國海洋文化傳統』,廣東教育出版社,1995.
- 杨威,「“一带一路”视阈下中国海洋文化国际传播路径探析」,『湖湘論壇』2019年1期,2019.
- 于凤·王颖,「我国海洋文化事业发展现状和建设研究」,『海洋开发与管理』2017年第8期.
- 刘家沂,「发展海洋文化产业的战略意义及对策」,『中国海洋报』,2017.7.26.
- 李思屈·诸葛达维,「面向海洋时代的文化产业」,『文化艺术研究』第5卷第3期,2012.7.
- 张开城,「海洋强国战略背景下的海洋文化产业发展研究」,『中国海洋经济』2016年第1期.
- 郝鹭捷·吕庆华,「我国海洋文化产业与海洋经济关系实证研究」,『广东海洋大学学报』第35卷第2期,2015.
- 黄沙·巩建华,「中国海洋文化产业发展历程、意义与趋势」,『中国海洋经济』2016年第2期.

〈Abstract〉

The Design and Direction of China's Ocean Culture Policy  
in the 21st Century

Kwon, Ki-Young

In 2012, the Chinese government set the construction of an “ocean power” as a new national strategic goal. Among China's future strategy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Road was the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 This paper aims to look at the framework and direc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s “ocean culture policy” amid the rise of ‘ocean’ in China's national strategy.

The Chinese government's ocean cultural policy consists largely of three policy categories: ocean cultural public service policy, ocean cultural industry policy and ocean culture foreign policy. China's ocean cultural public service policy is striving to popularize ocean culture with the aim of expanding the public's ocean consciousness. China's ocean cultural industry policy is striving to build a ocean cultural industry cluster and develop ocean cultural content, with the focus of the ocean tourism industry. China's foreign policy on ocean culture is pushing to globalize Chinese ocean culture by building an international exchange platform for ocean culture and revitaliz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ocean culture industry.

China's ocean cultural policy is still in its infancy, and this situation seems similar to Korea's. South Korea has also established a “New Southern Policy” as a national strategy,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oceanic”. At a time when the “oceanic” is increasingly highlighted in the national strategy of Korea and China around the same time, we expect that the design of policies related to ocean culture is one of the important national tasks and that it can be a cross-reference model between the two countries.

28 中國文化研究 第47輯

Key words: ocean power, ocean culture, ocean cultural industry, ocean  
consciousness, ocean culture policy, ocean Tourism

이 논문은 2020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20년 2월 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2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